

'5월 민생국회' 與野 신경전 팽팽

양당 원내대표 15일 회동, 개회 시기·법안 등 논의 한나라 "주요 법안 한꺼번에" 민주 "민생 법안만"

17대 마지막 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열자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와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상당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더불어 한미 FTA 비준안과 주요 현안 법안을 한꺼번에 들고 가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민생 법안만 선별처리하자며 선을 긋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기선 잡기의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17대 국회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원내 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기와 관련 당초 한나라당은 5월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14일 4월 국회 소집을 역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에 4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 개회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4월 국회소집을 역제안하고 나온 것은 원내 운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갈등의 소지는 법안 처리의 범위에 있다. 한나라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FTA 비준안, 출자총액제한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등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도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5월 중순까지 민생법안만을 처리하고 FTA 비준안과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으로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과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 관련 법안을 지목했다. 한미 FTA는 국론이 모아지지 않은 과제인데다 규제완화 법안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들로서 시급을 다루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즉 '민생 국회'가 아니라 '재벌 국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시국회 개회 시기와 처리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리실 내부 혁신해야" 한승수 총리 간부들 질책

한승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 청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실장급 이상 총리실 간부 직원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류국가가 되자고 했고, 일류 내각과 일류 총리실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일류 공무원이

돼야 한다"며 "일류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분발을 요구한 것.

한 총리는 취임 이후 한달 보름간 내부회의에서 직원들을 다그친 적이 없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준비 미흡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이 끝나 국정현안을 본격적으로 조

율해야 하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 총리가 내부혁신과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총리실에 일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외부에 의한 것이고, 이제는 내부혁신을 해야 한다"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총리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총리실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나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해보라.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 독려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차기 당권 경쟁 '카운트다운'

다선·중진·실세 의원 잇단 몰락... 권력지형 변화 정몽준 "당권 도전" 선언 등 10여명 몰림 움직임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다선·중진 의원들과 이명박 대통령 측 실세들의 잇단 몰락으로 여권내 권력지형과 입지조건이 변화하면서 '포스트 이명박'을 꿈꾸는 차기 주자들이 속속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향후 당권 경쟁은 '총추진 국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계파별·주자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였던 이재오 의원이 총선에서 낙마한 뒤 당분간 현실 정치를 떠나기로 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빅3' 행보=당에서는 현재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 대표, 정몽준 의원 등 '빅3'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빅3' 중에서 6선의 정몽준 의원이 가장 앞장서 출사표를 던진 상태.

정 의원은 13일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6선 의원으로 당 선출직 지도부 5명을 뽑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국의 '핵'인 박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탈당 친박계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와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친박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 이후 백의종군한 강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권에 재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경선 관리와 대선에 이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중진급 주자들=차기 당권을 겨냥한 4선급 주자로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김영선 정의화 의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

만 4선에다 원내대표를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라 관측이 적지 않다.

홍준표 의원도 당권에 근접해있는 차세대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아직 가타부타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향후 당 대표는 친이·친박 진영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의 할 일이 우선 결정된 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당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친박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만든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소장과 그룹=소장그룹 중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고 있는 '남·원·정'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때 비주류 소장파 리더였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중진급으로 우뚝 서면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몰리쳐 파란을 일으킨 박진 의원은 '다크 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안상수(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며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인위적 세불리기 안해"...복당 불허

"당내 계보정치 청산,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

한나라당 지도부는 14일 탈당 인사에 대해 당장 복당은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친상 중인 강재섭 대표를 대신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이 마련한 153석 외에 인위적으로 (의석 수를) 바꾸는 어떤 행동도 취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탈당 인사의 복당에 의한

세불리기를 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당내 정쟁으로 허비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소모적이고 국민이 걱정하는 당내 계보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친이도 친박도 당내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모두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서 "당직 등의 임명에 있어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계보 정치는 청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운선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인사의 복당 불허와 관련, "대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당론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6월 18대 국회 개원 전을 앞두고 복당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야당의 반발을 살 것"이라면서 "미리 파행을 막아야 한다. 복당은 지금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당외 친박 '독자 교섭단체'로 선회하나

한나라 '복당 불허'에 당분간 지켜본 뒤 실무 작업 착수

한나라당이 14일 탈당한 '친박(친박근혜)'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18대 원구성 이전엔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실상 입장을 굳힌 데 대해 당외 친박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8대 국회 개원까지는 한달반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복당'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상황을 지켜보며 행보를 결정한다는 것.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박은기입니다'에 출연, 복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 박 전 대표와 만남의 자리에서 '무조건 입당해야 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를 했고,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

다. 조금 지켜보겠다"면서 "전부 억울하게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기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청원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선별을 하겠다. 안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안들어간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한 사람씩 전화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 통일을 하려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친박 무소속 연대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당분간 기다려 보겠다"면서 "처음에는 복당이 어렵다고 할 수 있

겠지만, 원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이', '친박'이 없다고 했지만, 경선 과정의 대결 구도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친박'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또한 우리 모두는 친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을 돕겠다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복당 문제는 당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원구성 이전 복당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복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원하는 만큼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신문협회